

## 2.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21년 10월 28일
- 제출자 : 대구광역시장(기획조정실장)
- 회부일자 : 2021년 11월 24일
- 상정일자 : 제28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1년 11월 24일), 원안 가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조정실장 김정기)

### □ 제안이유

-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로 위임한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 □ 주요내용

- 법률에 위임에 따라 구·군을 대상으로 한 지방보조금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준용하여,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을 정하였으며,
- 예산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재난·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에 지방보조금을 계상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보조사업자 공모방식을 상세히 규정하여, 공고문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공모기간, 공모예외 사항 등을 명시하고,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였음.

## 3. 검토보고 요지 (보고자 : 전문위원 신록휴)

### ○ 이 개정조례안은

- ▶ 상위법이었던 「지방재정법」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기본원칙과 예산·결산·보조금·채권관리를 포괄 규정하고 있어, 보조금 운영체계 정비와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달리 정할 필요성이 부각 되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 1. 12. 제정, 2021. 7. 13.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에 이르게 되었고,  
 새로이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 전부개정을 하려는 것임.

## ○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지방보조금에 관한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하여 명시하였음.
- ▶ 안 제3조에서는 구·군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 보조율의 최소치와 최대치를 정하였음.

<안 제3조 지방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분야	최소(%)	최대(%)
보건·사회	30	70
산업·경제	30	50
도로·교통	30	50
상하수·치수	30	50
청소·환경	30	50
지역개발	30	50
문화·체육	30	70
민방위·소방	30	50
일반행정	30	50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정액보조	

이는 국고보조사업(국비보조)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의 범위를 정하는 것으로, 정부의 재정분권계획에 따른

대구시와 자치구·군간 세입 여건 변화, 국가사무의 지방이양(균특회계)에 따른 재원 부담 변화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야 할 것임.

- ▶ 안 제4조에서는 법 제5조제2항에 위임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방보조금을 계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음.

1. 재난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시책 상 필요한 경우

- ▶ 안 제5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公募)방식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공모 접수기간, 공고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재공모 절차, 공모 예외 등을 명시하였음.

- ▶ 안 제6조에서는 법에서 정한 사유 외에 조례에서 정하는 그 밖의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 등의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등이 있는 경우 교부된 보조금의 반환, 지방보조사업자의 수행배제, 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고도 정확한 후속조치를 통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 안 제7조에서부터 안 제8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을 통해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중요재산의 임의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부기등기에 관해 규정하고 있음.

※ 중요재산 현황보고(공시), 부기등기

- I. 중요재산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후 15일 내  
 II. 변동현황 보고 : 매년 6월, 12월  
 III. 중요재산 현황 공시  
 가.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나.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종물 : 10년  
 다. 항공기 : 10년, 라.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IV.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사항  
 - 해당 부동산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내에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자치단체장 승인 필요

- ▶ **안 제9조에서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새로이 제정된 상위법 「지방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존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위원회 본격 운영을 위한 체계를 정비하였음.

구 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개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현행)
설치근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회 의		분기별(원칙), 수시(필요시)	수시(필요시)
위원회 구성	위원수	15명 이내	15명 이내
	위원장	위촉위원 중 호선(互選)	민간위원 중 호선(互選)
	부위원장		위원중 호선(互選)
	당연직 위 원	기획조정실장, 복지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
	위원임기	3년 (한차례 연임可)	3년 (한차례 연임可)
	정족수 (의사,의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새롭게 재편되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상위법 개정의

취지에 따라,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한 실질적 기능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며,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보조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등을 통해 보조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와 사후 조치 등이 뒤따라야 할 것임.

- ▶ 안 제20조에서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공시 등 지방보조사업의 주요 내역을 주민에게 공시함으로써 시민, 사회단체 등에 의한 외부통제를 가능케 하였으며,
- ▶ 안 부칙(안 제1조 ~ 안 제4조)에서는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현행 조례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 구성, 임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 조례로 간주토록 하였으며, 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다른 조례의 개정 등 본 조례 개정 시행에 따른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였음.

## ○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 ▶ 이번 전부개정안은 지방보조금의 체계적이고 독립적인 관리를 위한 상위법이 별도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미비점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법성 등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 다만, 보조금 신청 및 지급의 투명성 확보, 효율적 관리 등 상위법 제정 취지와 개정조례에 부합하는 보조금 업무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답 변
<p>○ 안 제6조의 법령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 사유 중 제3항 “지방보조 사업계획서의 예정된 토지 또는 그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나요?</p> <p>○ 이와 관련해서 상위법에 관련 규정이 있어서 우리 조례에 반영한 사항인가요?</p>	<p>○ 네, 보조금이 내려왔지만, 부지 소유자와 협의가 안되거나 해서 정상적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등이 있겠음.</p> <p>○ 네, 그렇음.</p>

## 5. 토론요지

○ 없 음

## 6. 수정안 요지

○ 없 음

##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찬성)

## 8. 소수의견 요지

○ 없 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